

폐가전 전용 집하장 구축으로 수거 서비스 강화

전주시, 삼천동에 폐가전 전용 집하장 이전 완료…2월 2일부터 본격 운영 개시해

전주시민들은 앞으로 폐가전제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게 됐다. 전주시는 폐가전제품의 신속한 처리와 시민들의 배출 편의를 높이기 위해 기존 광역매립장에 위치한 폐가전 집하장을 삼천동 3가 889-8번지 일원(1371㎡)으로 이전 조성하고, 정상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폐가전 집하장은 그동안 매립장 내에 위치한 관계로 운영시간 제한 등을 이유로 급증하는 폐가전 수거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신고 후 수거까지 30일 정도가 소요되는 등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몇 년 동안 운영시간 등 제한이 없는 부지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으며, 마침내 인근 부지를 확보해 집하장을 이전하게 됐다.

새로운 집하장이 본격 운영되면서 기존 평균 30일가량 소요되던 폐가전 수거 주기가 5일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주당 약 80건에 불과했던 수거량도 300건 이상으로 4배 이상 늘어나 폐가전 수거율과 재활용률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냉장고나 세탁기, TV 등의 대형가전과 5개 이상 묶음인 정수기·선풍기 등 중·소형가전은 '폐가전 무상

방문 수거서비스'를 신청하면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전용 사이트에 '배출 예약' 메뉴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콜센터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중·소형 가전제품 수거 대상 품목이 확대(50개→전품목)됐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E-순환거버넌스와 협업해 '중·소형 폐가전과 폐배터리'의 효율적인 회수 체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용 수거장도 설치할 계획이다.

신승민 기자

20여년 난제 일명 송정리 1003번지 시민 품으로

광산구 광주송정역 맞은편 폐 유흥가 정비 해결책 마련

광산구가 광주송정역을 호남 관문다운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광장 확장 사업에 이어 오랜 난제로 방치된 역 맞은편 폐 유흥가 일대(일명 송정리 1003번지)를 시민 공간으로 전환하는 공공 주도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단순히 낡은 건물을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특색 있는 공간 활용 전략을 바탕으로 광주송정역 일대를 광주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대표 명소로 만들겠다는 목표다.

광산구는 광주송정역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고, 이로온 공간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광주송정역 폐 유흥가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주송정역 건너편 유흥시설 밀집 지

역은 오래전부터 안전·미관상 문제가 제기돼 왔다. 도시 첫인상을 저해하고,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지목돼 도시재생사업 등 개선 시도가 있었지만, 상가 소유주 참여 등 이를 실행하기 위한 동력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장기간 슬럼화된 상태로 방치됐다. 광산구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일부 토지가 광주송정역 KTX 투자선도지구 개발사업 대상지로 포함됐으나 대다수 유흥업소 상가는 제외돼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광주송정역 폐 유흥가 정비 사업'은 오랫동안 풀리지 않던 문제를 공공 주도로 해결하는 선제적 대응책이다.

광산구는 이달부터 2029년 12월까지

유흥시설 밀집 지역을 장기간 방치된 노후 건축물 등을 정비·철거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 썬치 쉼터를 조성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이다.

광산구는 총 66억 원을 들여, 단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단계로 방치된 시설, 노후 건축물을 철거해 도시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 취약 요소를 제거해 시민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구축한다. 2단계에서는 총면적 900㎡ 35면의 주차장, 총면적 585㎡의 썬치 쉼터를 조성해 문화·휴양, 상권 활력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한다. 박병규 구청장은 "시민이 머물고 싶은 곳,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명소로 탈바꿈시키겠다"라고 밝혔다.

손권일 기자

3개월 만에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탄력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전담팀 신설,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위원회 결성 등 무주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무주군은 첫 관문인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관한 보건복지부 협의가 지난 2일 최종 마무리됐으며, 이를 기반으로 무주군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및 예산 편성 등 남은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무주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재원은 2025년 공모했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군비) 184억 원

으로, 개인별 지급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무주군의회와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노창환 무주군 기본소득 위원회 위원장(무주군 부군수)은 "이제 무주형 기본소득이라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에 군민이 체감하는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시행하려는 사회보장제도의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그리고 제도가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조정하는 절차로, 이번 협의는 전국 군 단위 지자체 중 최초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며, 중앙정부로부터 사업의 공익성과 정책적 타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인정 여부'는 기본소득이 수급자들의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돼,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수급액이 감소하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게 됐다.

한편, 무주군은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수시로 협의하며 '무주형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임을 강조해 왔다.

김서주 기자

국가산단 유치, RE100 반도체 자문단 위촉



순천시가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해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자문위원 8명을 위촉하고, 육성 전략 고도화 및 유치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이번 자문위원 위촉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전력·융수·임지·채산에너지·환경 등의 복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산업 현장과 정책을 아우르는 시각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의 견해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대학·연구기관·시민사회·지식재산 분야 등 각계 저명한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위원은 권석

준 성균관대학교 교수, 김춘이 기후생태연대 대표, 임동건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이순형 동신대학교 교수, 맹종선 광주·전남 반도체공동연구소 교수, 이 지면 순천대학교 교수, 조성은 순천대학교 교수, 천영준 비즈앤테크놀로지사무소 대표 변리사다.

위원들은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논리 자문 ▲전력·융수 등 핵심 인프라 대응 방안 ▲중앙부처나 관계기관 협의 지원 등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순천시는 위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논리를 한층 고도화하여 반도체 국가산단 최적지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순천시 여건에 대해 장시간에 걸쳐 노관규 순천시장과 기탁없이 의견을 나누면서 순천 RE100 반도체 국가산단 유치 가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순형 자문위원은 "전남 동부권 양질의 전력 생산이 가능하고 광양항·여수공항 등 물류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반도체 국가산단의 최적지 중 한 곳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권석준 자문위원은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력들이 고려하는 가장 중요한 정주여건은 교육환경으로 순천시는 이미 국가산단 배후도시에 국제학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신대 외국인 교육기관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좋은 여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관규 시장은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인 만큼 단순한 임지 제안을 넘어, 종합적이고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가산단 유치를 위한 실행력을 한층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우덕현 기자

고흥 우주항공복합도시 포럼 공동 개최

고흥군-사천시, 우주를 향한 골든타임…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답하다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사천시와 함께 3일 사천시청 대강당에서 「미지 답 사천포럼(우리의 미래, 지방에 답이 있다)」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우주를 향한 골든타임, 복합도시 특별법으로 답하다'를 주제로, 글로벌 우주산업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천호 국회의원, 공영민 고흥군수, 박동식 사천시장, 관계 공무원,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날 포럼은 황호원 항공안전기술원장의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정책적 효과」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신상준 KAI 상무의 「산업 생태계와 K-우주항공의 미래」, 김종성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의

「사천과 고흥을 연결하는 우주항공 신산업벨트」를 주제로 한 특강이 이어졌다.

또한 종합토론에서는 명노신 교수(경상국립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이상섭 본부장(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김태형 회장(KAI 협력사협의회), 최성임 교수(광주과학기술원), 김용규 교수(순천대학교) 등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을 중심으로 토론을 펼쳤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포럼은 고흥과 사천이 협력을 통해 국가 우주항공 산업의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공론화와 정책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 우주산업 성장과 인구 유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달성

우덕현 기자

스마트농업육성지구 공모 ‘전국 최다’ 선정

국비 200억…진안군 신규조성형, 김제시 지구지정형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진안군(신규조성형)과 김제시(지구지정형)가 동시에 선정돼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다.

신규조성형으로 선정된 진안군은 마령면 일원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인력양성 스마트팜, 교육연구센터, 분양형 스마트팜 단지 등을 집적 조성하며, 핵심 시설 구축에 국비 200억 원이 투입된다. 지구지정형으로 선정된 김제시는 새만금 농생명용지(6-1공구) 내 기존 스마트팜 단지를 스마트농업육성지구로 지정받는다.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사업 추진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여건을 확보했다.

이 부지에는 임대형 스마트팜, 농업스타트업 단지, 스마트 APC 및 가공센터를 포함한 세대통합형 스마트농업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이번 선정으로 「스마트농업법」에 따른 인허가 의제와 제도적 특례가 적용돼 사업 추진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건축허가,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

허가, 도로·하천 점용 등 필요한 대부분의 절차가 일괄 의제로 처리돼 행정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된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특례가 적용돼 수의계약을 통한 장기 임대(10년+10년 연장),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 사용료·대부료 감면 등이 가능해

저 민간 투자와 기업 유치 기반도 강화된다. 도는 이번 지구 지정을 계기로 청년농 창업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스마트농업 전후방 산업이 집적된 클러스터를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 모델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기자

경제 영토 확장 가속도…제3산단 확장 전격착수

전북 익산시가 미래 신산업 거점 확보와 기업 유치를 위한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사업의 첫 삽을 뜨며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에 나섰다. 익산시에 따르면 최근 익산 제3일반산업단지 확장 조성 사업이 착공에 돌입했다.

착공은 행정적 준비 단계를 넘어 실제 단지 조성을 위한 실행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익산의 산업 지도를 새롭게 그릴 핵심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번 확장 사업은 기존 제3일반산업단지 인근에 약 27만㎡ 규모의 산업 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프로젝트다. 이는 향후 추진될 대규모 신규 산업(제5산단) 조성 전, 폭발적인 기업 수요

를 선제적으로 수용하기 위한 '전략적 확장'이다. 특히 동우하이켐㈜, ㈜케이비케이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들이 이미 입주를 대기하고 있어, 조성 완료와 동시에 가시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있다.

익산시는 2028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상반기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한 매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이미 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토공 작업에 즉시 착수하는 투트랙(2-track) 공정을 가동한다.

현장 사무실 설치와 가설 웬스 설치 등 기초 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입주 대기 기업들이 조기에 투자 계획을 수립

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와 행정 지원을 병행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제3산단 확장은 익산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라며, "제5산단이라는 거대 프로젝트로 가는 길목에서 단 한 곳의 기업도 투자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틈틈이 산업 용지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2026년 악취저감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감시와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한다.

악취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상시 24대의 악취 측정 장비와 측정 차량을 운영하며 상시 감시를 진행한다.

이채봉 기자